지난해 1조1100억 적발…보험사기 근절 새로운 대책 시급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근절하자

〈하〉 민·관 힘 모아야

‘사기 방지’ 개정안 국회 통과…보험금 반환 등 빠져 실효성 의문
업계 ‘보험 사기 유도’ 미끼상품 자제하고 시민들 적극 제보 절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지난해 1조 1100억원을 넘겨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해마다 전국 경찰력을 동원해 보험사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법체계와 정책의 개선부터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비롯해 민·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해 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추진됐으나, 보험업계에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금융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권 보장, 보험사기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마련 의무화,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 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보험업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명단 공표,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보험사기로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도입, 입원적정성 심사 비용 지원 등에 관한 항목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업무나 직업과 관련한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함께 대상 보험사기 조사·수사 정보와 보험사기 관련 데이터, 사례 등을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통일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및 향후 과제’ 브리핑 자료를 통해 “보험사기죄의 경우 일반 사기죄와 비교하더라도 처벌 수준이 낮은 상황”이라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돼야 하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세우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듯한 미끼 상품을 출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보험업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자동차 보험상품 중 사고 상대방이 12대 중과실 사고를 저지를 경우 보험금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인 ‘피해자 부상 치료비’라는 항목을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도 상품’으로 꼽는다. 이 경우 오히려 ‘신호위반·역주행 차량을 들이받으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참여도 중요하다. 현행법상 보험사기 적발 과정은 시민 제보 또는 보험회사의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데서 시작하는 만큼, 시민의 제보가 활발할수록 보험사기 적발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제보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2명의 제보자는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생·손보협회로부터 2억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나눠 받았다.

또 다른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해 특별포상금 5000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원을 추가 수령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충 방역 무더위로 인해 모기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18일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임동 서방천 일대 방역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655,306,758원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모금 종료

1년간 국민 성금 8666건

일본과 전범기업의 배상금이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마련한 배상금 수령을 거부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민들의 성금을 모아 주겠다는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종료됐다.

1년동안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이어져 총 6억5500만원을 모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은 “지난해 6월 부터 시작된 ‘역사정의를 위한 시민모금’이 1년여만에 8666건의 기부로 총 6억5530만6758원의 모금액을 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8월 판결금 수령을 거부한 양금덕(96) 할머니와 이춘식(104) 할아버지를 비롯해 피해자 2명의 유족에게 각각 1억원씩 총 4억원을 사전 지급한 것을 포함해 모금액 중 81%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10%는 역사 정의를 위한 홍보·교육 활동, 9%는 인건비 등 사무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단기간에 6억5500만원이라는 성금이 모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굴욕외교에 대한 국민의 회초리를 뜻한다”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에 대해 법원에 공탁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응원성금으로 이어져 모금액이 급속도로 높아졌다는 점에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5·18기념재단 ‘5·18 왜곡 대응 백서’ 펴내

5·18기념재단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및 폄훼에 대응해 온 기록을 정리한 ‘5·18 왜곡 대응 백서’를 펴냈다.

5·18기념재단은 18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응과 진상규명’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백서에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진상규명의 한계와 그로 인해 왜곡이 확산돼 온 과정이 담겼다.

5·18 왜곡은 5·18 당시부터 신군부 세력에 의해 시작됐다는 조사결과도 기록돼 있다.

1980년 5월 21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담화문을 통해 ‘타 지역 불순 인물 및 고첩(고정간첩)들이 광주에 잠입해 난동행위를 선도했다’는 왜곡을 자행하고, 언론보도를 검열하고 군·경 문서와 증거를 위·변조 및 소실시킨 것이 왜곡의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5·18 왜곡의 주체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국가·정부에서 민간 단체와 민간인으로 변경됐다는 모니터링 결과도 포함됐다.

극우논객 지만원씨가 2002년 8월 신문에 ‘광주사태는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군중을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은 것을 시작으로 인터넷, 도서, 신문 등 매체를 아우르며 ‘북한군 개입설’을 퍼트렸다는 것이다.

지씨는 ‘북한 특수군(일명 광수)이 광주시로 내려와 5·18을 조종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은 북괴 정치공작원들이 위장한 것’ 등 주장을 펼쳤다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당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백서는 지씨뿐 아니라 ‘전두환 회고록’, 위덕대 교수의 5·18왜곡 강의, 5·18 폄훼 신문 만평 등 각종 왜곡에 대한 법률대응과 왜곡처벌법 제정 과정 등을 다뤘다. 전일빌딩에서 총탄 흔적을 발견한 이후 헬기사격 진상규명, 행방불명자 규명, 암매장 추정지 발굴 등 진상규명 과정도 담겼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정호기 우석대 초빙교수를 비롯한 집필진이 참석해 5·18 왜곡 대응 및 진상규명 운동의 전개와 의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담당한 김정호 변호사가 전씨 재판 과정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또 5·18 왜곡 대응에 관한 제안도 나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전남교육청, 글로컬 박람회장 미래교실 2개월 연장 운영

전남교육청이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장 내 유치원·초등·중등·프로젝트교실 등 5개 미래교실을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 운영한다.

글로컬 미래교실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콘텐츠 중 가장 큰 관심을 끌었다.

미래교실에서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실시간 번역 프로그램 도입으로 언어장벽을 해소하는 한편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습 결과 공유로 의사소통과 협업 역량을 함양하는 미래교실의 모델이 실제 수업으로 구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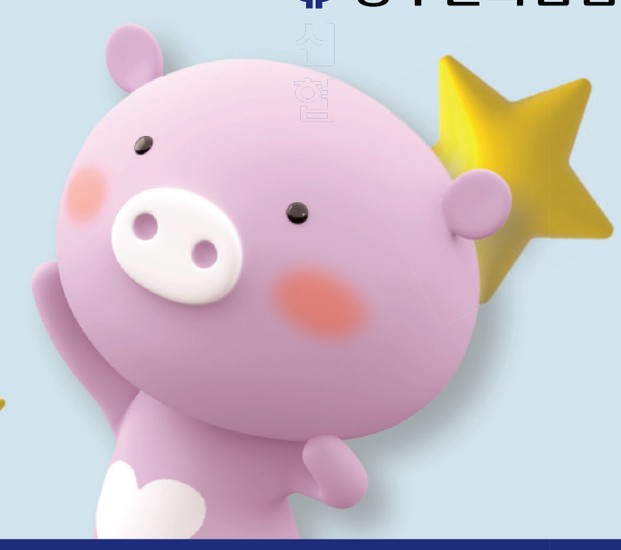
2개월 연장 운영하는 미래교실에서는 초·중등 교과교육연구회의 미래수업 연수 및 세미나, 미래수업 사례 나눔, 미래교실 활용 수업 체험,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및 연찬회, 미래교실 체험·관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